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9. 8.(화) 11:00
(지면) 2026. 9. 9.(수) 조간

배포 2026. 9. 8.(화) 06:00

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국제기준 논의에 산·학·연 공동 대응한다

- 산·학·연 참여 '국제해사기구(IMO) 자율운항선박 대응협의체' 본격 가동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국제해사기구(IMO)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·조선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「IMO 자율운항선박(MASS) 대응협의체*」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해양수산부, 한국선급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, 해운·조선업계, 학계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

국내외적으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IMO는 2030년까지 강제규정을 마련한다는 목표*로 지난 5월 자율운항선박 비강제규정을 채택했다.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8월부터 「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(2026~2032년)」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.

* IMO는 비강제규정을 토대로 선박운항데이터 등을 분석해 규정 실효성을 검토 후 강제규정 마련 예정

협의체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IMO의 최신 논의 동향을 산·학·연과 공유해 국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. 아울러, 국내 연구개발 성과 중 국제기준에 반영할 사항을 발굴해 IMO 의제로 개발 및 제안하고, 국제회의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. 이를 통해 국내기술의 국제기준 반영을 확대하고, 산업계가 국제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은 우리나라 해운·조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, 국내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며, “산·학·연의 역량을 모아 국제기준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,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51-773-5810)
		담당자	서기관	심규석 (051-773-5863)
<협조>	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	책임자	사무관	박기범 (051-773-5825)
		담당자	서기관	주민규 (051-773-6205)
			사무관	하보윤 (051-773-6202)